

출장복명서

일본 사례조사 및 심층면담

- 일본 산업 구조조정 및 협동조합 관련 -

2016. 7.

< 출 장 개 요 >

□ 출장목적

- G20 연구로 이루어지는 구조개혁 및 Inclusive Growth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사례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
 - 연구주제인 '산업 구조조정'과 '협동조합'의 각각에 대해 일본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을 하고자 함.
- 산업 구조조정 관련 사례조사 및 심층면담
 - 한국 조선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일본이 1970~80년대 겪었던 조선업 구조조정 경험과 더불어 철강업 및 석유화학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해 관련 협회 및 부처를 방문하여 면담을 하고자 함.
 - 또한 금융업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 관련 부처와 면담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자 함.
- 협동조합 관련 사례조사 및 심층면담
 - 2013년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올해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이후 G20 연구로 이루어지는 구조개혁 및 Inclusive Growth 연구보고서에 활용 교훈으로 삼을 일본 협동조합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을 하고자 함.

□ 출장지 및 방문기관

- 출장지: 일본 도쿄
- 산업 구조조정 관련 방문기관
 - 일본조선공업회(日本造船工業会)
 -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日本石油化学工業協会)
 - 일본철강연맹(日本鉄鋼連盟)
 - 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国土交通省 海事局 船舶産業課)
 - 일본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철강과(經濟産業省 製造産業局 鉄鋼課)
 - 일본금융세미나
- 협동조합 관련 방문기관
 - Hosei(法政) 대학 대학원: Kurimoto Akira(栗本 昭) 교수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 일본JC종합연구소(日本JC総研)

□ 출장자

- 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장자
 - 안상훈 연구위원,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 협동조합 관련 출장자
 - 김준경 원장, 최슬기 겸임연구위원, 김선진 전문위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 출장일정

- 일정: 2016년 7월 19일(화) ~ 27일(수)
 - 7월 19일(화) ~ 27일(수), 8박 9일(주말 포함): 나정현 전문연구원
 - ※ 단, 7월 23일(토)~24일(일)은 주말인 관계로 관련 기관 방문이 어려움.
 - 7월 19일(화) ~ 20일(수), 1박 2일: 안상훈 연구위원
 - 7월 19일(화) ~ 21일(목), 2박 3일: 구자현 부연구위원
 - 7월 20일(수) ~ 22일(금), 2박 3일: 김선진 전문위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 7월 22일(금), 1일: 김준경 원장, 최슬기 겸임연구위원
-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해당자
7/19 (화)	09:00~11:05	출국: 서울(김포) → 도쿄(하네다) (KE 2707)	안상훈 구자현 나정현
	11:05~15:00	이동 및 중식	
	15:00~18:00	일본조선공업회 방문	
	18:00~	간담회 (1)	
7/20 (수)	10:00~12:00	일본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철강과 방문	안상훈 구자현 나정현
	12:00~15:00	중식 및 이동	
	15:00~17:00	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 방문	
	17:00~	석식 및 이동	
	16:20~18:35	출국: 서울(김포) → 도쿄(하네다) (KE 2709)	김선진
	19:20~21:30	출국: 서울(김포) → 도쿄(하네다) (KE 5709)	정성진
	19:55~22:15	귀국: 도쿄(하네다) → 서울(김포) (KE 2710)	안상훈
7/21 (목)	09:00~10:30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방문	구자현 김선진 정성진 나정현
	10:30~12:00	일본JC종합연구소 방문	
	12:00~15:00	간담회 (2)	
	15:00~17:00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 방문	
	17:00~	석식 및 이동	
	19:55~22:15	귀국: 도쿄(하네다) → 서울(김포) (KE 2710)	구자현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해당자
7/22 (금)	08:00~10:10	출국: 서울(김포) → 도쿄(하네다) (KE 5711)	김준경/최슬기
	10:10~12:00	이동	
	12:00~13:30	간담회 (3)	김준경/최슬기 김선진/정성진 김정현
	13:30~16:00	Hosei 대학 대학원(Kurimoto 교수) 방문	
	16:00~19:55	이동 및 석식	
	19:55~22:15	귀국: 도쿄(하네다) → 서울(김포) (KE 2710)	김준경/최슬기 김선진/정성진
7/23(토)~24(일)		※ 주말인 관계로 관련 기관 방문 없음.	나정현
7/25 (월)	09:00~18:00	일본철강연맹 방문 및 자료 수집	
7/26 (화)	13:00~18:00	일본금융세미나 참석	
7/27 (수)	15:40~18:00	귀국: 도쿄(하네다) → 서울(김포) (KE 5710)	

- 숙박호텔: Hotel Villa Fontaine Tokyo, Roppongi
 - 1-6-2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 tel. +81-3-3560-1110
 - 출장자별 숙박 예약 완료 및 사후 실비정산(조식 불포함)
- 일본금융세미나: 금융 Facsimile 신문사 세미나
 - 수강비 사후 실비정산: 29,700엔

< 질 의 내 용 >

1.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 방문 면담 목적

- 한국 조선업의 경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은 일본이 1970년대 및 80년대 겪었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함.

☐ 질문사항

- 일본 구조조정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
- 고용(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구체적인 사례
-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구체적인 사례

☐ 요청사항

- 일본조선공업회 내 전문가와의 면담
- 호시 학계, 업계, 노동계의 조선업 전문가 추천이 가능한지?
- 미쓰비시 조선소 등 주요 조선소 관계자와의 면담
- 조선소 및 과거 조선소 구조조정(도크 폐쇄)으로 변화한 지역 등의 방문

2. 석유화학 및 철강업 구조조정 관련

☐ 질문사항

- 일본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
-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의 구조조정 사례(예: M&A)

< 방문면담 내용(1): 일본 산업구조조정 관련 >

1. 조선업(1)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19일(화) 15:00~18:00
- 장소: 일본 조선공업회 회의실
- 참석자
 - KDI: 안상훈 부장,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 일본조선공업회(日本造船工業会): Kiriake(桐明) 상무이사, Kono(河野) 차장

□ 주요 회의 내용

Q. 일본의 조선업 현황?

- 한국은 빅3가 50% 이상의 해양 플랜트, 나머지가 조선소
- 빅3의 전략,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음.
- 운 안 좋게도 석유 가격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진 것이 원인
- 해양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것은 이미 채산이 안맞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

Q. 전세계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일본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궁금. 설비감축을 했는지?

- 2번 조선불황에 부딪힘. 당시 전세계 50% 이상을 일본이 시장점유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짐.
- 일본은 설비를 증설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중국은 증설
- 현재의 수요 기준으로는 총톤 3,500GT~4,000GT가 적정

- 중요한 대책문제는 고용정책과 지역경제가 중요함.
- 일본의 경우 우선 해고하기 전에 '조선불황카르테르'를 특별히 인가받음. 일하는 총량을 조정함. 총량을 췌어함.
- 순시선 등 20석을 정부가 발주해도 큰 도움은 안되었으나 그래도 발주함. 한 회사당 한척 정도 밖에 안됨.
- 그래도 일본 조선사는 대형~소형 모두 생산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척을 받아도 그나마 괜찮았으나 지금의 한국의 빅3는 큰 도움 안됨.

- 다음으로 구조조정 위해 '고용조정 조성금'을 구성. 노동성이 돈을 냄.
- 가령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하거나, 새로운 일에 취직했을 때 새로운 회사에 보조금을 줌.
- 그때 조선이 안좋을 때여도 다른 업종은 경기가 좋았음.
- '출항'이라고 하여 조선사에 소속은 그대로 두되 자동차 회사 등에 파견가기도 함.
-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 민간, 정부 등이 출자. '산업고용안전센터'를 설립.
- 출항처를 찾아줌.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목표로 매칭해줌.

Q. 한국의 경우 정규직보다 협력업체가 많은데 당시 일본은 어땠는지?

- 50%씩이었음.
- 조선업은 사이클이 큰 업종으로 협력업체를 많이 썼음.
- 해양플랜트에 많은 하청업체를 두었을 것으로 한국의 상황이 어려운 것임.

Q. 중소형 조선사를 통폐합하고 대규모 회사는 설비축소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형은 성공, 대형사는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는지?

- 합병해서 강해지라고 하나 경기가 좋을 때는 좋으나 경기가 나쁠 때는 의미 없음. 결국 사람을 자르는 것이 문제임.
- 지방의 소형 조선사는 퇴직금도 낼 수 없음. 설비투자 위한 은행 대출도 갚지 못함. 따라서 그 당시 정부는 그 소형 조선사를 그대로 사들임.

Q. 그후 사들인 소형 조선사를 어떻게 했는지?

- 1980년대, 1990년대 2번에 걸쳐 불황
- 대상: 토지와 설비
- 설비에 대해서는 회계상(book value)의 값으로 사들임.
- 토지는 그 당시 시장가격 토지가격으로 사들임.
- 설비는 다른 회사 등에 매각. 그 도크를 사들이되 신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 지방자치체에 매각: 항구 재개발로 활용 가능하므로.

Q. 실제 가격으로 사지 않고 book value로 사들인 이유는?

- 비싸게 삼.
- 철수하는 조선사에 좀더 값을 지불하기 위해.
- 그래야 조선사가 은행 대출 등을 갚을 수 있기 때문.

Q. 그 정책은 소형사만 또는 대형사에도?

- 대형사에도 같은 상황이었으나 대형사는 아직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사에는 없었음.

- 정부가 돈을 내준 것은 아님.
- 경쟁사가 줄어든 것에 따라 남는 조선사가 경쟁력이 높아짐.
- 가령, 계약한 가격에 대해 0.26% 정도를 남는 조선사가 지불한 것임.
- 정부가 수행했다고 하기 보다 업계가 책임을 진 것임.
- 토비, 설비 모두 매가 가능했음.
- 최종적으로는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설비를 매각함. 고철로 나누어서라도 매각.
- 1차 때는 어려웠으나, 2차 때는 부동산 버블이라 토지가 잘 매각됨.
- 토지가 바다에 면하고 있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예: 스웨덴의 마루메시. 시간을 걸치지 않으면 안됨. 1~2년 만에는 어려움.
- 장기적으로 10~20년 정도에 걸치지 않으면 어려움.

Q. 10~20년 간 그 지역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 시 전체에 타격을 완하하도록 함.
- 결국 파산하는 것이므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함. 타격을 완하하는 것임.

Q. 정치적으로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온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타협했는지?

- 정치가에게도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함. 노조에도 설득.
-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이는 만큼 조선사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님. 왜 조선업만 구해
- 제도 만들 때도 정부 자금을 내는 만큼 국회논의 필요하며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설명 잘 하여 반대하지 않도록 한 후 국회에 올림.

Q. 설득하는 주체는?

- 조선업협회. '코시파' 같은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임.
- 일본 조선업협회가 설득함. 본 협회 뒤에는 각 조선사 사장이 있음.
- 조선업 내부적으로 납득하여 추진함.
- 정부가 리드해도 타업종으로부터 반대가 생김.
- 조선업 자체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함. 어디까지 감수하느냐가 관건임.
- 정부도 산업은행 등도 어려운 상황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살릴 수 없다. 부채가 너무 큼. 일본에서 보기에 대우의 부채는 너무 커서 살릴 수 없다고 예상함.

Q. 1970~80년대 당시 대형사는 '육상부분'으로 전환/주력함에 따라 한국 조선사에 일반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 조선업에 있어서 대형사가 규모를 줄인 것이 불리했던 것 아닌지?

- 당시 종업원을 줄임에 따라 기술자가 한국에 많이 이전하여 한국 수준 오름. 지금은 한국 기술자가 중국에 시프트함.

Q. 중소형사는 표준화 전략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해보면 적절했는지?

- 같은 배, 설계도면을 시리즈화 정형화하여 코스트를 줄임. 일본은 그 전략으로 감.
- '고부가가치선'은 이익이 안남. 전략이 다른 것임. 수익을 얻기 위해 같은 배를 건조한 것임.

Q. 한국에서는 대형사의 인건비가 너무 높음. 약 연봉 8천만원. 최근 일본의 조선사 인건비?

- 일본보다 높음. 700만엔. 환율에 따라 다르나. GDP 대비 낮은 듯.
- 사무직~노동자 통합해서 평균으로 7천만원.

Q. 현재 한국에서의 이슈는 대우조선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 회사 하나 도산하면 업계 살릴 수 있음.

Q. 일본에도 같은 사례있는지?

- 없음. 대우는 정부의 돈이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정부 책임도 있어 어려울 듯.
- 일본의 경우는 불황에도 정부 자금이 들어간 것은 없음. 모두 민간은행에서 투입함.
- 20년 전 대우의 경우는 다름. 한국의 정보가 너무 오픈됨.

Q. 일본의 조선업이 자동차산업보다 이익이 좋은 것 아닌지?

- 자동차는 30%는 국내, 70%는 해외에서 많은 이익을 냄.
- 조선업은 해외에서 이익 내는 곳은 2곳 정도로 대부분 국내에서 이익을 내고 있어 제한적임.

Q. 자동차는 수출이 많아 환율 영향 받는데 조선업도 환율 영향 받는지?

- 기준은 달러이므로 해외에서 조선하는 곳은 2곳 밖에 없으며, 10~20% 정도밖에 안되므로 환율 영향 제한적.

Q. 선박의 표준화, 정형화는 일본 국내용인지?

- 수출용으로 정형화함.

Q. 조선업의 국내외 매출 비중?

- 1척 당 1 조선사가 건조.
- 일본 국내 선주가 얼마나 매출 올렸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대략 실질 오너가 80%가 일본 국내.
- 일전에 그리스 선주가 일본에서 조선하기 어려웠음.
- 형태는 수출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용

- 한때는 그리스 선주가 많았으나 일본 선주 힘이 강해짐.

Q. 한국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기술자 육성이 중요. 모텍크(미츠이해양) 같은 엔지니어링 제고 위해 협회에서 힘쓴일 있는지?

- 전혀 하는 것 없음. 중국이나 싱가포르 여기저기에서 생산. 엔지니어링만 제공. 모텍도 현재 어려운 상황임.
- 해양은 전부 안될 것임. 취소가 안되므로 점점 없어질 것임.

Q. 한국 조선업에 하고 싶은 말?

- 결국 수요가 없음. 최근 3년 내에는 수요 없을 것임.
- 본래는 지금쯤 나오는 수요는 이미 2~3년 전에 계약된 것임.
- 가령 아이보라는 규제가 생김. 선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작은 배일수록 어려웠음.
- 2014년 전에 계약된 배에는 본 규제 적용되지 않아 그 당시 우선 계약만 해둬.
- 카케코미 수요로 일본은 이미 확보.
- 당시 한국은 해양플랜트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음.

Q. 1980~90년대 일본 구조조정시 일본 기술자가 한국으로 시프트했는데 그 충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 핵심인력은 남겨두고 구조조정해도 될 사람만 자른 것임. 희망퇴직을 받음. 따라서 그렇게 충격 없었음.

Q. 구조조정 과정 중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 관련자료협조 받을 수 있는지? 추천자료 있는지?

- 조선업은 신규 진입은 용이하나 퇴출시에는 구조조정 등 무척 어려움이 따름.
- 중국도 국영만 남긴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 최소 3년, 길게는 5년을 지금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관건으로 건디는 수밖에 없음.

2. 철강업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20일(수) 10:00~12:00
- 장소: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철강과 회의실
- 참석자
 - KDI: 안상훈 부장,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 일본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철강과(經濟産業省 製造産業局 鉄鋼課)
: Nota(乃田) 총괄보좌

□ 주요 회의 내용

Q. 일본의 철강업 현황?

- 수출 중 1위가 자동차, 2위가 철강
- 세계시장: 중국 기업 약진

Q. 일본의 철강업 경쟁력 제고

- 세계 시장 과잉공급
- 중국과 일본: 세계 2위 공급자인 일본과도 공급능력에서의 차이 발생
- 세계 철강사가 같이 도산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함.
- 시장왜곡적조치: 도산 직전의 회사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는 피해야 함.
- 과잉공급능력은 세계시장 성장에 있어 악영향을 미침.
- 최근 한달간 7월 9~10일 G20에서도 '무역장관회의'에서도 과잉공급문제를 논의하고 공감함.

Q. 일본 철강업에서의 구조조정

- 2012년에 신일본제철과 수미토모금속 합병
- 최근에는 닛신세이코우도 합병
- 중국도 합병 추진하는 등 세계의 흐름에 일본도 따라가야 함.

Q. 세계적인 합병 추세를 보면 아셀로 메탈이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일본과도 경합관계이나, 최근에는 중국 회사의 약진이 눈에 띈.
- 일본 회사들이 합병을 해도 이 회사를 따라가기는 어려움.

Q. 아셀로 메탈은 다국적 합병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합병해야하는 것인지 고민 중.

- 가령,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병?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만의 합병은 무의미함.
- 가령, 각 지역에 있어서의 강점, 철강 종류에 따른 강점 등 세분화도 필요.

-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합병에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음.
- 합병 시 각 기업문화가 있으므로 하나의 나라 내에서 합병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름. 다국적 합병 시에는 문화의 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

Q. 신일본제철과 수미토모의 합병 후의 시너지효과는?

- 개별적인 제품면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비슷한 거래처를 두고 있었으나,
- 세계시장에서는 2012년 합병 당시 세계적으로도 합병 추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광로가 오래됨에 따라 합병함에 따라 오래된 설비의 중지 면에서 집약적인 합리화라는 효과는 있었음.

Q. JEF 스틸에 대해서는?

- 카와사키제철과 NT, 2010년 쯤 합병

Q. 한국에서도 철강업의 구조조정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합병 시 정부지원책?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정부조직인..)와의 조정이 필요. 국내의 시장이 과점 되는지 여부를 관리.
- 그러나 철강은 글로벌 시장이므로 포스코에 주목. 한국 국내 시장에서는 과점은 추진되나, 포스코가 합병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영향.

Q. 경제산업성의 '산업재편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 있는지?

- 그와 유사한 법이 있으나 타 과에서 관할

Q. 합병 시 이러한 법에 따라 지원하지 않았는지?

- 합병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면 일부 세금면제 등의 지원은 있음.

○ 최근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업활력제고법'이 8월에 실시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산업재편법을 참고함.

- 어느 특정 산업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법
- 일본에서도 3개의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경쟁강화법'이 있음: 채무, 능력 등

Q. 자동차에 이어 철강 수출이 많은데 어디에 수출이 되는지? 자동차가 수출됨에 따라 철강도 수출 되는 것인지? 중국 철강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 일본 철강 수출은 동남아시아가 많음. 동남아시아에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으며 그에 따른 일본 철강 수출도 있음.
- 파이프라인 형태의 철도 있으므로 자동차 산업에 따른 수출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영향은 있음.
- 제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 정도

Q. 10% 비중 추후 높아질 것으로 보는지?

- 중국 과잉공급에 따라 저렴하면서 질 좋은 철강을 더 수입할 가능성은 있음.

Q. 일본의 생산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가 계속 유지되는지?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 이 생산력은 유지 될 듯. 국내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수요도 있을 듯. 중국의 과잉공급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쯤 고용조정조성금을 내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를 위한 정책을 펴기도 함. 이는 세계적인 불황에 따라 다름.
- 철강업계에서는 1970년 이후 생산력 피크화한 후에는 제품,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의 노력은 있었음.

Q. 철강 고용자수 22만 명이라면 대형사 뿐만 아니라 하청업도 포함하고 있는 듯 함.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고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어떻게 경쟁력 유지하고 있는지? 고로 뿐만 아니라 특수강회사도 포함 되고 있는 것인지?

- 중소기업의 고용자 수 많으나, 용광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차지.
- 가공분야에서는 중소형사 포함.

3. 조선업(2)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20일(수) 15:00~17:00
- 장소: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 회의실
- 참석자
 - KDI: 안상훈 부장,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 일본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国土交通省 海事局 船舶産業課)
: Kohno(河野) 실장, Ida(井田) 과장보좌, Kikuchi(菊池) 계장

□ 주요 회의 내용

Q. 조선업 구조조정에 있어 일본 정부의 당시 역할, 현재의 역할, 고민하는 사항

-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 등 설명: 일전에 중국 관계자에 설명한 자료 참조(p.5, 8, 10, 12, 13)

- 제1차 오일쇼크 때 고용대책
- 구 노동성이 주관하는 법제 소개
 1. 경기변동등 고용조정사업
 - * 기업 실업 대책을 위한 조성
 2. 사업전황등 고용조정사업
 - * 선박, 선용기관 등 전체의 1/5
- 도크 폐쇄 후 토지 사용법
 - (영문 자료 p.10) 차트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표시
 - 그 지역 요구에 따라 재생, 그 지자체가 대부분을 매수하여 공업단지, 철강공장 등으로 활용
 - 대표 예: 오사카 공장 사례
 - 토지 사용 예로 미쓰비시의 요코하마 활용지(단, 상기 설명자료와는 관계 없음.)
 - * 특정선박제조업안정사업협회에 의한 매수실적

○ 별첨 자료 3: I-shipping

Q. 제1차 오일쇼크 시 정부 측에서의 지원은 없었는지?

- (설명자료 p.10) 본 체계를 구성한 것이 정부이나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것은 아님.
- 업계의 자생적인 희생, 분담이 중심
- 국가적 법제는 아닌, levies

Q. 1970년대 일본의 상황은 불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었는지?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상황은 많은 정부 자금이 들어갔음.

- 1970년대의 시장도 불황이었으나, 당시 일본이 조선 1국이었던 현재 한국과 유사.
- OECD에 의견 말하기를, 조선업 불황에 있어 어떤 나라든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경우가 없었음!
- 한국의 상황으로 KDB과 민간은행 등이 대출 많은데, “기업구조조정제도”가 생김에 따라 복잡, 변경된 사항.
- 조선업 구조조정 원칙에 있어 한국 정부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있으나, 현재 고민사항은 대량의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

Q. 지역경제: 토지 매수 시 지자체가 직접 매수한 것인지, 펀드가 있었는지, 정부 지원되었는지?

- 일본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금을 준 것은 없었음. 형평성 측면에서 안됨.
- 지자체 자비로 매수, 지자체가 주택을 건설 시 그 수익으로 매수

Q. 일본은 조선소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으나, 한국은 한곳에 밀집되어 있어 충격이 큼.

- 일본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토나이카이에 많은데, 조선사도 많이 있음.
- 유사한 지역에 다른 조선사에 재취직 등이 가능했음.

Q. 제2차 위기 때, 10개사 중 9개사가 적자였다고 회의록에 적혀있는데, 상기 상황과 유사했는지?

- 제1차 불황 시에만 활용한 매커니즘이었으며, 제2차 때 다시 매커니즘을 활용.

Q.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정부는 직접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접근한 이유가 있었는지?

- 이 스킴을 생각하고 법률화한 것은 정부, 리더십은 정부가 한 것임. 강제로 관두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업종내에서 손실이 없도록, 일본 경제나 세계시장에 악영향없이 극복.
-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지 않고 업계가 자생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함.
- 업계 합의 하에 본 매커니즘을 작동하도록 함.
- 이 시스템은 현재는 없음. 한국이나 중국시장 커짐. 일본만의 생산력을 줄이기만 해도 된다는 상황이 아니므로 어려움.
- 한국은 한 지역에 소수의 조선사가 있는 상황이므로 본 매커니즘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 다른 산업과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개인적 소견.
- 조선업은 세계 하나의 시장이므로 한국의 조선업 대책이 세계시장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함.
- 정부가 금융적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 하나의 국가의 돈으로, 보조금 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세계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런 지원책을 펼치려고는 하지 않음.

Q. 과거, 현재 조선업 부품업체를 위한 대책, 현재의 부품업체는 어떠한지?

-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음.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도 해당함.
- 현재는 미쓰시비중공업으로서 일하는 사람보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음. 불황오면 먼저 영향받는 것은 하청업체이며 역시 대량의 실업자 대책이 중요함.

Q. 인건비 차이는?

- 하청업체끼리 조직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안을 내기도 함.

Q. 일본도 현재 조선업은 어떠한지?

- 세계 신조수주량, 건조량 추이. 올해 들어 시장 악화, 작년까지는 일본 조선사가 많이 수주 했기에 2~3년은 문제 없으나, 올해들어 수주가 없어 그 후는 문제임.
- 세계의 선박유통량에 따라 신조하는 것이 시장상에서의 수급량.
- 2010년에 들어 과잉공급에 따라 선박이 남아돌아 더 이상 선주의 새 주문이 없을 듯.
- 길게는 10년은 불황이 올 수 있음.

Q. 1970년대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순시선 등을 발주했는데 현재는?

- 대 중국으로 해양경비를 위한 측면에서 순시선을 개량하는 것은 있으나 조선업을 위한 것은 아님.

Q. 일본의 해운사. 해운금융(선박금융) 여건이 어떠한지?

- 한국은 해운사가 없어 고민임.
- 일본은 유명해운사 3사가 있으며, 그 해운사가 발주하며 민간금융으로부터 대출. 용선료를 통해 회수.
- 해운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세계 단일 시장이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별도 없음.
- SSE: OECD 내의 기조

Q. 정부사이드의 자금보다 해운사 자체가 은행을 이용시 글로벌 은행을 활용하는지 일본 국내 은행을 활용하는지?

- 양쪽다 있으나 기본은 일본 국내 은행 활용. 각 회사별로 메인뱅크로부터 대출함.
- 조선소가 있는 지역뱅크를 활용하기도 함.

Q. 행정조직상 운수성에서 국토성으로 바뀐 사유?

- 15년 전 행정 재편에 따라 통폐합됨.

4. 석유화학업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21일(목) 15:00~17:00
- 장소: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
 - KDI: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김선진 전문위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日本石油化学工業協会): Murayama(村山) 부장

□ 주요 회의 내용

- 한국의 문제: 경제측면-저성장, 사회적측면-고령화가 큰 문제임. 일본 석유화학에 있어서의 고도화에 대해 듣고 싶음.

Q. 일본의 석유화학 현황?

- 일본 석유화학은 무척 호조: 통폐합과 축소를 통해 호조
- low-end 범용화로부터 high-end 고부가가치로 시프트
- 석유화학은 당초 국가정부 주도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주적인 통폐합을 진행!!

(1) 일본의 에틸렌 장치 중지

- 한국은 100만톤 플란톤이 중심이나 일본은 소규모 플란톤이 다수있었으며, 15기가 있었으나 12기로 축소함.

(2) 석유화학업 변천

- 일석화학(현재 JX일광일석)
- 제1차, 제2차 에틸렌 불황 카르텔을 거치게 됨.
- 1983년 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 시행
- 1987년 역오일쇼크로 인해 불황업에서 제외됨.
- 법률을 통해 강제적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 법률 폐지
-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적자로 들어섬에 따라 법률로는 통폐합을 할 수 없어 자유경쟁으로 통폐합을 진행함.
- 2014년 경제산업성의 “석유화학시장구조연구연구회보고서” 등으로 통해 구조조정을 모니터링
- 개별 각 사가 자주적으로 통폐합 등을 진행하게 됨.

(3) 과거 20년간의 생산/능력/가동률 추이

(4) 석유화학시장구조연구회 발조

- 일본에 있어서 석유화학업은 생활과도 밀접하고 일본 국가에 있어서 본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함. 단, 문제가 있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경제산업성은 사적인 연구회인 본 연구회를 발족.
-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를 적용한 공식보고서를 작성
- 우선 1차적으로 50조를 석유제조회사에 적용. 일률적으로 10% 감소시킴. 별도 강화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감소시킴.
-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도, 거의 수출하지 않고 국내용
- 2차 적용으로 석유화학. 각 사에 따라 제품이 다르며, 반 이상이 수출용으로 석유와 다름. 석유의 강화법 같은 별도 법률도 없음.
- 경제산업성은 강제성을 없으나 어떻게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는 소프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5) 연구회 작업: 에틸렌 생산량상정(비관적 시나리오 설정)

- 비용 커브에 따라 시나리오별 생산량을 상정
- 상기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방향성을 검토
- 강점을 늘린다는 점은 이미 각사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회 안건으로는 상정하지 않음.
-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검토
- 하드면에서는 이미 법률(제도)이 있으므로 그 법률을 활용

(6) 경제산업성의 검토

- 보고회에 대한 반성: 단순히 보고서 발표가 목적이 되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부분의 공장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체의 협조를 통해
 - 경제산업성, 각 기업, 지자체가 각 역할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임.
 - 경제산업성의 시간축
 - 2020년이 하나의 목표축: 도쿄올림픽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Build & Scrap!! 100만톤급 공장을 지으면서 소규모 공장을 축소.
 - 일본 각 사는 이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일본 내 공장을 마더공장으로하여 국내에서는 연구, 기술개발에 강화
- 산업화구조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 것에 감명받음.
- 다음으로 유리, 펄프 등 소재별로 적용함. 경제산업성의 소재산업화
- 기업활력제고법을 8월에 시행 예정. 일본의 산업경쟁화법을 토대로 함.
- 한국 정부에서는 철강업에 우선 적용하고 싶어함.

- 철강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강에 대한 별도의 고도화법 등을 제정해야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할 듯.

Q. 정부 주도에 있어서 업계 반발은 없었는지?

- 결국 정부 주도는 실패로 끝남.
- 기본적으로 반발이 있기도, 없기도 함.
- 회사에 따라 범용화 회사는 정부 주도에 의문시 했으나, 고도화 회사는 정부 제안에 공감.
- 정제, 기초, 정밀화학
- 한국에서의 문제는 대기업이 상기 모든 분야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
- 자본 효율성을 위해서는 좋으나 일본은 작은 회사가 많고 각 회사마다 강점이 있음.
- 합성고무: 각 사마다 다른 합성고무를 제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고민은 수직적. 범용화에 대해 큰 고민
- 가령, PTA에 있어서는 중국이 비중 거의 100%
- 일본에서는 PTA를 미쓰비시 밖에 하지 않음.
- 미쓰비시는 필름을 위한 PTA만 제조. 미쓰이도 페트를 위한 PTA만
- 범용화에 있어서도 특수화학용 제조로 경쟁력 강화
- SK 케미칼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 세우는 등 기술력 유출에 놀람. 결국 일본은 핵심기술력이 중요!
- 일본은 기술조합(연구회) 등을 만들었으나 잘 안됨. 결국 기술제휴는 어려울 듯.

* “철강은 국생, 결국 석유화학은 민생” 석유화학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업!

< 방문면담 내용(2): 일본 협동조합 관련 >

1. 일본 협동조합 연합회(1)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21일(목) 09:00~11:00
- 장소: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KDI: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김선진 전문위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Ito(伊藤) 본부장, 강성준 담당

□ 주요 회의 내용

1) 개요

(1) 일본생협의 특징

- 조합원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
- 생협법(1951년)에 의거하여 설립
- 권역내에서만 사업활동 가능: 다른 소매업이 생협에 대한 거부로...
- 조합원만이 서비스 활용 가능
- 일본생협련: 연합회, 독립적인 조직
- 생협 하에 의료복지생협 존재, 한국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 단위생협, 지역생협이 1차, 연합회는 3차 조직
- 생협의 21세기 이념-생협 2020 비전
- 5가지 액션플랜 중 1,2번에 주력
- 지역생협이 주사업 담당. 조직수는 늘어나나 가입자수는 감소 추세, 가장 큰 NGO 단체이기도 함.
- 택배사업과 점포사업 주력
- 택배사업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당초 그룹배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개인배달 시작.
- 다소 시스템이 낡았다고 보여지나 일본생협 중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임.
-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옴. 생협하면 택배. 지방일수록 강세.
- 생협 조합원 가입자 평균 연령이 60대
- 70%가 MD, 30%가 PB

(2) 지역사회 만들기 참가

- 일본의 문제: 고령화와 인구감소, 자연재해!
- 택배사업 중의 조합원 안부 확인(정해진 날짜, 시간) -> 복지사업, 복지활동: 지역커뮤니티의 중심!
- 택배운전기사가 지역패트를 등 많은 일을 담당
- 보육지원사업, 자연재해의 복구지원

(3)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산직사업” 조합원과 생산자간의 교류실현, 조합원들의 생산지 방문, 생산자와의 교류
- 환경보전의 활동: 리사이클을 다른 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 조합원의 높은 의식으로 가능, 친환경점포
- 일본 국내적인 활동이 중심이나 국제 사회와의 연계도 지속
- PB 브랜드: 독자 공장은 없이 제조업체에 별도 규격으로 주문

2) 협동조합이란?

- ICA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옴.
 - 조합원 중심!
- 협동조합의 유형
 - 생산자 측면
 - 소비자 측면
 - 각각의 협동조합이 해당 개별법에 의거하여 운영.
 - 세계적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이 있고 그 하에 개별법이 있는 것이 대다수
 - 일본 생협: 후생노동성 주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음식, 생활물자 공급을 후생노동성이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생협, 농협 등은 각 주관부처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음.
 - 전쟁 전 협동조합: 산업조합법에 입각, 농촌지역의 생활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그 중 일부인 도시 생활자를 위한 공동구매에 입각한 생협 생김.
 - 제2차 대전 후 물자공급을 위해: 마을 단위의 생협이 중심이 됨.
 - 전후 농협, 어협, 신협 등 개별법이 생김.
 - 1948년에 생협법이 제정, 농협은 그보다 1년 전에 제정
 - 각 개별법은 각기 다른 기준, 생협은 농협보다 좀더 규제 엄격.
 - 한국의 생협도 동일, 생협
 - 다른 농협의 경우는 20% 정도 자금 내면 활용 가능
 - 예외적으로 의료생협은 의료법에도 입각.

-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지역내(현 내)로 한정. 60년 후에 겨우 옆 현까지 확장, 통폐합 가능하게 됨.
- 금융 이외는 사업 가능. 생협법에 의거하여 '조합원을 위해 최대 서비스를 제공'함. 신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관에 명기. 단, 이 정관은 정부 인가 필요
- 최근 4월부터 전력판매 자유화가 시작. 몇몇 생협에서는 본 사업 시작. 이를 위해 정부와의 교섭함.
- 생협에 대한 규제(이유): 중소소매상인의 압력이 컸기 때문. 여당(자민당) 지지층인 소매상인이 나 농인들의 반대.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상황임.
- 일본생협의 역사: 1920년대 공동구매로부터 시작. 전쟁전에 있었던 생협은 대부분 없어졌으나 코베 생협은 현존.
- 일본 생협연은 1955년에 설립. 현재 회장도 코베 출신
- 카가와 토요히코: 일본 생협의 아버지(코베 출신), 기독교 선교자. 가난한 지역인 코베를 위해 봉사활동 추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선사업만으로는 안되고 "자조"해야한다고 생각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됨. 모든 생활은 여러 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
- 현재 생협조합원은 전국 약 2,800만명(중복다소 있으나...)
- 생협 중 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생협도 있으나,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전국 조합자 수는 약 6천만명
- 조합원 수는 조금씩은 증가 추세
- 사업은 90년대부터는 유지, 또는 약간 감소하기도: 고령화, 저출산, 경쟁심화
- 주 사업 중 점포사업은 감소이나 택배사업은 증가 추세
- 당초 택배사업은 그룹택배로 시작했으며, 배송의 효율성,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서임. 단, 생협 조합원이 전업주부라는 것이 전제였으나, 현재는 전업주부가 많지 않아 그룹 만들기 어려워짐. 이웃과의 교제가 줄어들어 따라 개인택배가 늘어남.
- 유통업계 중 생협 3위 차지(단순 비교는 어려움)
- 고객만족도 높으며, 생협보험도 인기(택배운전기가사 보험 판매). 이에 현재는 보험업계에서 반대 많아짐.
- 자연재해에 대한 생협 활동: 관동대지진 때부터 시작.
- 코베대지진: 효고현과 생협 체결- 위기에 닥쳤을 때 물자공급을 생협이 하는 것으로 체결. 이 체결은 70년대 오일쇼크 시 급격한 물가인상을 안정화 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시작
- 이를 시작으로 지역내 위기사 물자공급을 그 지역 생협이 담당하게 됨.
- 미야기 대지진: 특히 미야기현은 전세대의 70%가 생협 조합원!(평균은 30%). 미야기현의 위기를 책임지는 것이 생협! 전국 생협으로부터 약 36억엔 모금!
- 후쿠시마 원전 후 생협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 한끼를 통해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되는지(내부피복)를 검사. 현재도 검사 진행. 수치가 경계하로 검사되고 있으며 '냉정하고 제대로 판단'하고자 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쿠마모토 대지진 때도 지원
- 협동조합 원칙에 의거하여 각 지역생협 간의 협조를 이루어감. 소비자인 조합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참가한다는 것이 생협의 강점, 특징임.

-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협동조합원 수 줄어들음에 따라 사업 전개가 어려워짐.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협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지속해서 노력 중

Q.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배당수익률? 지역내에서 배당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어떻게 하는지?

- 배당을 받기 위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님. 배당 시 상한선이 정해져있음. 출자금에 관계 없이 1인 1표.
- 생협에 따라 다르나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 시 0.3~0.5% 정도로 배당.
- 생협에 따라 다르나 1구좌 당 100엔, 1,000엔 등 각각 다름.
- 택배의 경우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 계좌로 배당 배분함. 또는 증좌를 유도
- 생협 포인트를 적립하여 환원하는 등 코스트를 들이지 않고 환원하려고 함.
- 총합회에서 잉여금 처분 방법에 대해 결정. 기본적으로 모든 수익을 배분하지는 않고 신규 사업 등을 위해 적립함. 그 적립금 후 남은 이익을 배당시, 이용액에 따른 배당과 출자에 따른 배당으로 나뉘어짐.
- 1인당 출자금 평균 3만엔 대.

Q. 정부 지원책, 세제혜택 등이 있는지? 보험 판매 시 규제 없는지?

- 법인세 경감. 단, 지금의 정부 방침으로 일반법인세가 낮아지고 있으나 협동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차이가 3~4% 정도의 차이 밖에 없음. 농협은 농업지원금 등이 있으나 생협은 별도 없음.
- 보험업: 일반 보험업은 금융청 관리나, 생협은 후생노동성 관리

Q. 신협 등과의 연계?

- 없음. 지역단위로 그 지역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도.
- 조직으로서 대출 받음.

Q. 개별법만 존재하고 기본법 만들지 않는 이유 있는지?

- 물론 오랫동안 기본법 만들려고는 해왔음. 특히 2012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협동조합들과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기본법 만들려고는 했으나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공통의 협동조합법을 만들기 어려웠음.
- '노동자협동조합'을 위한 법이 없어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됨.

Q. 아이쿱 '두레' 같은 곳 있는지? 생협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

- 일본에는 없음. 농협과 제휴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추진 중
- 이와테현 재생가능에너지화를 위해 생협도 참가. 연합회와 그 지역 생협이 발전소에 출자. 그 전기를 생협이 구입함으로써 그 지역의 고용창출 등에 기여.
- 히로시마: 폐가된 농가를 빌려 농협 지도 하에 장애인 고용을 하여 농업활동 진행하기도. 그 농작물을 생협에서 판매

Q. 보험업에 있어서의 생협 경쟁력 있는지?

- 생협의 택배운전기사사 보험 판매. 영업맨으로서의 신뢰도 높음.
- 공제와 보험의 차이: 공제는 단순하고 보험료가 싸.
- 과거에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불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반해 생협의 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기도.
- 택배운전기사의 임금체계: 월급제. 인센티브? 지역생협에 따라 다르며 큰 금액은 아님.
- 정규직은 보험판매 가능하나, 아웃소싱은 경우는 보험판매 불가.

Q. 환경보전하게 된 계기? 규제 등 때문인지?

- 1960~70년대 생협 발전. 그 당시 환경문제와 안전한 먹거리 등이 문제화 됨. 주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협에 가입하게 됨. 이러한 배경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이기에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
- 원래부터 생협에서는 장바구니 지참 등이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음.

2. 일본 협동조합 연합회(2)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21일(목) 11:00~13:00
- 장소: 일본 JC종합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KDI: 구자현 부연구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김선진 전문위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 일본JC종합연구소(日本JC総研): Maeda(前田) 부장, Ataka(阿高) 부주임연구원

□ 주요 회의 내용

3. 일본 협동조합 전문가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7월 22일(금) 13:30~16:00
- 장소: 일본 Hosei(法政) 대학 대학원 회의실
- 참석자
 - KDI: 김준경 원장, 최슬기 교수, 김선진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 일본 Hosei(法政) 대학 대학원: Kurimoto(栗本) 교수

□ 주요 회의 내용

1) 학교 소개

- 호세이대학의 『연대사회 대학원』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간부를 육성하는 세계 유일의 교육 기관
 - 일본 협동조합 총연합회에서 2015년 설립하였으며,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함.
 - 공통된 목표가 연대사회를 만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라 공공정책학과와 정치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동조합, 협동조합, NPO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모두 일본생협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임.(작년 13명, 올해는 10명, 연령대는 20대 후반-69세)
 - 국제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 스웨덴과 의료 협동조합 및 육아 협동조합에 관한 공동연구 진행 중 (Victor Pestoff)
 -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Hagen Herny 교수와 공동 연구

2) 일본의 협동조합

(1) 일본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

- 2차 세계대전 전 일본 협동조합은 산업조합법 밖에 없었으나, 연합군이 재벌개혁, 농지개혁에 성과를 내기위해 농협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소비자협동조합,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금융부문 협동조합 (협동조합 은행, Shinkin은행, 노동은행, Norichukin 은행)이 설립되면서 현재 9개 협동조합이 각기 다른 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음.
 - 관할 부처도 농림청,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청 등 다양함.
 - * 이러한 개별법적 구조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구조이며, 한국의 기본법은 큰 전진

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버블일지,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70년 이상 개별법으로 운영됨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는게 불가능.

□ 법인세 혜택 있음 일반기업은 25.5%. 협동조합은 19%.

- 영리법인에 법인세 줄여주는게 타당한가?

- 공익성과 비영리는 다른 차원의 개념임. 공익은 불특정 다수. 비영리는 이익을 배당할지의 여부임. 일본은 출자금 배당은 인정. 단 상한액이 있음(생협 10%, 농협은 8%) 존스홉킨스의 정의(잉여금 배분하면 영리)에 따르면 일본은 영리가 되지만, 조문에 비영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의 세율 적용됨.
- 일본의 협동조합은 조합원 이외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단, 농협은 20% 비조합원 이용)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생협은 전철역 에도 쇼핑센터를 내지 못함. 결국 새로운 사업 기회 제약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율을 낮게 해줌.

(2) 생활협동조합

□ 발전 과정

- 1960-70년대 걸쳐서 고도경제성장 하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불량 식품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게 되었고, 주부층이 안전한 식품을 공동구매하자고 나타난 조직이 일본 생협의 기원임.
- 공동구매위해 5-6명으로 구성된 “반”을 만들어 예를 들어 순수한 우유를 낙농가에 가서 직접 주문하고 배달비를 지불하는 방식.
- 1990년대에 배달 사업을 시작하게 됨.
- 배경: ①소매업자들은 생협을 견제하여 규제의 적용을 요구 ② 개인주의 때문에 공동구매 어려워짐.
- * 1960년부터 합병을 통해 소매상점이 감소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소매상 많아진 경우로 소매상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하였음. 소매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1930년대에 백화점법, 1970년대에 대형 소매업법(대형 소매업들의 개점을 억제하기 위해 생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슈퍼들은 개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음(개점 착안에서 시행까지 몇 년이 걸릴 정도였고, 개점해도 인정받지 못함)
- 배달사업으로 맞벌이, 혼자, 아이가 어린 부모 등으로 조합원 계층이 확장됨.

□ 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

- 농협은 나라의 보호를 받아온 반면, 생협은 정부지원 없고 오히려 무관
- 전통적으로 농협은 여당과 가까움: 농림수산성 행정부, 농협, 자민당 농림속 국회의원 밀접한 관계로 철의 삼각지대 형성, 정치자금과 표 모두에서 농협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들이 선출

됨. 국회의원들이 농협을 위한 법률 제정, 농림수산성 집행함.

- 최근 일본생협연합은 중도를 지키고 있음. 상업자연협과 연대하는 자민당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교류하자는 추세.
- 생협의 의료복지공제 파트는 공산당과 관계가 많음(일본의 공산당은 유럽의 사회민주당)

Q: (원장님) 한국의 아이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한 살림, 두레, 아이쿱 중 아이쿱이 가장 새롭고 일본의 생협과 가장 비슷함. 조합원들이 지불하는 회비가 생협의 운영비로 이용되고 제품 마진 남기지 않는 미국, 캐나다 생협에서 하는 direct charge 형식으로 회비의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이 살수록 이익인 구조이고, 구레와 같은 식품 클러스터, 배송센터와 여러 제조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와는 달리 일본생협은 제조는 하지 않음(Co-op 브랜드, PB브랜드 ??) 자사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위스와 한국이 유일함. 아이쿱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지속될까 생각하고 있음.

Q: (원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해 대중융합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음. 협동조합은 정치로부터 중립, 정치적 활동 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협동조합과 정치개입 어떻게 보시는지? 진정한 의미의 자조자립운동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와 거리를 많이 둘 수 없음. 로비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부에 이용당하거나 정당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됨. 자주, 자립, 정당 이용되면 안된다는 ICA 원칙은 정치 개입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 일본 협동조합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농협법이 예외임

(3) 농협

- 전국농협협동조합중앙회(JA Zenchu)는 오랜 기간동안 정치영역과의 관련성이 높아 순수한 협동조합으로 평가되지 않음 (후지타니, 오타와라, 이시다)
 - 농협중앙회는 정치적 조직으로서 전국에 하나 각도마다 하나씩 있고 부 농협정책 하청받는 단체임.
- 근래에는 아베정권이 농업 개방 등 농협에 대해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변화가 있음.
 - 작년에 농협법을 바꿔 ① 농협중앙회를 일반 사단법인으로 만들. 단위 농협에 대한 모범정관 제정 및 강제 감사 권한을 박탈함. ② 농협이 해산하지 않고 생협이나 주식회사로 바로 전환 가능하게 법적 기반을 깔아놓음.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회사로 전환하고 싶었음) ③ 이사회에 경영전문가 포함을 의무화 하는 등 농협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게 됨.(그동안 구관매 사업의 적자를 신용 공제의 흑자로 메꾸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사업부문 강화하기 위함)

(4) 대학교 생협

- 다른 나라는 교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데 일본의 대학 생협은 학생들도 포함.

○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나? 참여? 가격 서비스 경쟁력있게 제공하고 있나?

- 교직원, 학생 같이 만듦. 2차대전 이후 밥을 제대로 먹자는 취지로 식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 서점 생협 만들어짐. 이러한 대학교 생협이 2000년대이후부터 국립대학 법인, 사립대학 민간 가게 들어와 임대료받으면서 체인점, 편의점과 경쟁이 붙어서 생협이 어려워짐.
- 대학생협은 싸지만 영양가 많은 식단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학부모들을 이용함. 식당쿠폰을 학부모에게 팔고 그걸 자녀들에게 줘서 영양가 있는 밥을 먹는지 체크함. 민간이 들어와도 견제할 수 있게 됨.

cf) 고등학교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만들 수 없음.

- 가구,의료품,공제보험 판매하는 선생님들의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이 있을 뿐.

(5) 의료생협

☐ 의료공제단체

- 1908년 시마네현에서 농민들이 의사를 고용해서 진료받는 의료이용조합을 만든 것이 시초임. 1930년대에는 도쿄의료이용조합이 설립되었고, 생협의 아버지인 가가와 도요히코 등도 설립함. 2차 대전 후에 활발해짐.
- 농협 자체가 출자, 가입하는 형태로서, “후생농업협동조합”이 되었음.
 - 의료접근성이 소외된 지역에 설립되면서 1951년에 공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음. WHO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는 인식은 별로 없음
- 일반 소비자와 의료자가 조합원이 될수 있음.
 - 99%가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1%가 공급자. 간호사, 사회운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조합원들이 거의 고령자로서, 건강한 고령자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에 대해 공부함. 생협의 “반” 조직을 배워와서 혈액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공유하고, 당 수치 등을 서로 크로스체크, 건강체조를 함께 함.

☐ 의료건강생협

- 의료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환자들을 위한 권리(알권리, 의료받을 권리, 운영에 참가할 의무) 헌장을 제정함.

☐ 2001년 개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이 개호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제정 전에는 노인 지자체, 사회복지법인만 가능했으나, 제정 후에는 영리, 비영리, 협동조합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개호사업자가 급격히 늘었음.
- 생협, 의료생협, 농협도 케어서비스에 참여하게 됨. 매출이 일본의사협회 1400억엔, 의료생협 600억엔, 소비생협 400억엔.
- 소비생협 주부들이 2000년 되니 부모를 걱정할 나이가 되어 개호생협의 밑바탕이 됨.
- * 1984년 고베쿠프에서 2시간에 1200엔으로 1984년 소비생협 조합원들이 고령자, 장애인,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의 생활지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음. 당시에는 개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
- 또 하나의 루트는 생활클럽협동조합에서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 모두 홈케어자격사가 있는 여성으로 파트타임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쇼핑, 요리 같이 해주거나 생협에서 받아 배달 등의 활동을 함. 이것이 바탕이 되어 2001년 개호법 제정될 때 자연스럽게 개호법에 참여하게 되었음. 있음. (이것은 workers collectives임; cooperatives가 아님)

※ 일본의 의료보험

- 발전과정: 1927년 노동자보험이 도입 → 1938년 8개 직업별(노동자, 농민..)로 나누어진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됨. → 1961년 전국민 보험.
- 현재 1.건강보험조합(대기업직원대상). 2.협회건강보험 3.공무원 4. 국민건강보험으로 분류되어 있고 앞에 3개는 통합해나가자는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
- 저소득층, 실업자들도 가입할수 있는데 보험료 내지 못하는게 문제점.
- 7-8년 전에 75세이상 후기고령자를 위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도입됨.
- 자기부담 10% (고소득자 20%) 로 기존 30%를 밀돌아 세금, 다른 건강보험 들의 돈이 투입되고 있음.
- 2001년부터 개호보험(장기 요양보험) 시행
- 65세 이상 중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대상으로 함.
- 45%가 세금으로 충당. 45% 보험료. 10%가 개인부담. 고령자를 위한 복지가 개호보험으로 확대됨.
- 독일방식을 모방하였는데, 차이점은 일본은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돈은 받지 않음. 케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 여성이 될 것이고, 여성 남성 역할을 나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택하지 않음.
- 급여비가 3조엔에서 10조엔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지역포괄케어법을

시행함.

- 지역에 고령자가 계속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주택, 의료, 예방, 생활원조를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함.